



주간 통일정세

2014-19

Contents

-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또 공군부대 시찰...비행훈련 독려(5/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공 및 반항공군 제 447부대를 시찰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 부국장, 조정철 보위사령관,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홍영철마원춘 당 부부장이 수행했으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리병철 사령관과 장동은 정치위원이 이들을 안내함.
 - 이밖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평안남도의 '1월18일기계종합공장'도 방문해 공장 현대화 공사를 지시했으며 공장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럽철성, 윤동현, 홍영철, 마원춘이 동행했으며 박태성 평안남도 당 위원회 책임 비서가 이들을 안내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신실세' 박태성, 평남도 당 책임비서에 임명(5/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을 현지에서 맞이한 박태성을 "조선노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로 소개함.

- **北 김정은, 축구경기 관람... "축구기술 수준 높여야"(5/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인들과 함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경기에 참가한 '만경봉팀'과 '소백수팀'의 남자축구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경기를 관람하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 방법을 완성해 축구기술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축구경기 후에 북한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 국방체육단의 양궁 남녀 단체전도 관람했다고 통신은 전함.

- **'총살설' 北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 건재 확인(5/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6일 평양에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열린 소식을 보도하면서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이 토론했다"고 전하면서 현송월이 처형됐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이날 대회에서 군복을 입고 첫 토론자로 나선 현송월은 "원수님께서 문학예술 부문의 침체와 부진을 놓고 얼마나 애타하시고 계십니까"라며 "모란봉악단의 창조정신, 창조기풍은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우리의 일과



를 맞추고 한편의 명작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깡그리 부수고 목숨까지 바치려는 각오"라고 말했다고 TV는 전함.

● 北 전국예술인대회 개막…김정은 찬양 작품 독려(5/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이날 저녁 김기남·최태복·최룡해 노동당 비서, 럽철성 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안동춘 문화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등 고위간 부들과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 예술단체가 참가한 전국예술인 대회가 열렸다고 행사 모습을 방영함.
- 김기남 비서는 보고에서 "김정은 동지의 천출위인상을 격조 높이 칭송한 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 천만군민의 가슴에 원수님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신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TV는 전함.

● 北 김정은 "영화혁명으로 세계적 영화 만들자"(5/17, 노동신문)

- 17일자 노동신문에 의하면 김 제1위원장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전달한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카자'에서 "무엇보다 먼저 영화 부문에서 영화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하겠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지금 문학예술 부문 사업이 당과 혁명의 요구, 시대의 부름에 따라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현시기 문학예술 부문이 주저앉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문학예술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금 명백히 강조해 문학예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이번 전국예술인대회를 소집했다"고 밝힘.

● 北, '張속칭'으로 공식된 쿠바 대사에 박창을 임명(5/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쿠바 주재 대사에 박창을 임명됐다고 보도함.

■ 김정은 동향

- 5/14,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흡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 시찰(5.14,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럽철성, 조경철, 윤동현, 홍영철, 마원춘 동행
- 5/14,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방문하고 현대화 과업을 제시(5.14,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럽철성, 윤동현, 홍영철, 마원춘 동행 및 박태성(평안남도당 책) 맞이



- 5/15,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15일 윤석천 노인(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거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5.15,중앙통신·중앙방송)
- 5/16,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봉팀↔소백수팀의 남자 축구경기 관람(5.16,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변인선, 박영식, 럼철성, 조경철, 김영철, 오금철, 박정천, 마원춘 등 관람
- 5/16,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은 당 제1비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압록강 국방체육단 활쏘기 선수들의 활쏘기경기 관람(5.16,중앙통신·중앙방송)
- 5/17,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등 중요대상 건설 지원에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17,중앙방송)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이 정립한 '주체적 문예이론' 성과 및 주체사실주의는 '김정은의 영도밑에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예술창조 활동에서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불변의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5.12,중통)
- 김영남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5월 13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참관(5.13,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정형을 현지요해하고 현지에서 내각·성·중앙기관 일꾼협의회를 진행(5.14,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생전, '영화예술론('73.4.11) 및 무용·음악예술론과 미술론' 등 '문예발전에 관한 수많은 저작들을 발표, 주체적 문화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환희 밝혀주었다'고 칭송(5.15,중앙통신)

나. 경제

- **北, 모내기 본격 돌입... '먹는 문제' 해결 총력전(5/1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2일 "개성시안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이 일제히 모내기전투에 진입해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라며 "기계 모내기와 손 모내기를 배합해 시작부터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 **"北 올해 쌀 생산량 190만t 전망...작년과 비슷"(5/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FAO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식량전망'(Food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은 190만t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이로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의 연간 쌀 생산량은 평균 170만t



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가을부터 1년 동안 북한 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7.8kg으로, 지난해(65.4kg)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北 "절약이 곧 생산"...'에너지 절약형' 기술 강조(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승고한 애국심의 발현—절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지금 어디서나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 전력이고 에너지"라며 "에너지를 10% 절약하는 것은 10% 생산하는 것보다 사회경제적 효과가 더 크고 원가도 훨씬 적게 든다"고 강조함.

- **호주, 대북 식량지원 위해 28억원 기부(5/14,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호주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을 위해 지난해 300만 호주달러(약 28억 7천만원)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기부했다고 전함.
 - 호주 국제개발청의 제나 핸드 대변인은 2013 회계연도(지난해 7월~올해 6월)에 300만 호주달러를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이달 초 WFP와 기부를 위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힘.
 - 이어 호주 국제개발청 관리들이 지난해 말 방북해 WFP를 통한 식량분배와 김시 상황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함.

- **北 "원산은 동해의 진주"...대규모 리모델링 추진(5/17, 통일신보)**
 - 북한 외자 유치 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리성혁 부국장은 지난 1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을 공개했다고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가 17일 보도함.
 - 리 부국장은 "원산시의 도시중심축을 새롭게 형성하고 주변에 상업봉사구역과 문화휴식구역, 과학기술교류구역을 배치할 것"이라며 "수영관, 수족관, 급등어교예장(돌고래서커스장), 문화오락휴식장 등 관광시설들을 해안을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송도원해수욕장에 1만2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봉사시설을 증설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그는 "원산비행장은 하루 수천 명 능력으로 새로 건설하며 원산-금강산 관광도로와 병행해 새로운 고속관광철도를 건설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며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 울림폭포, 석왕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관광로를 형성할 것"이라고 소개함.



● 北학술지 "김정은 경제노선 핵심은 기업 독자성 강화"(5/18, 연합뉴스; 경제연구)

- 연합뉴스가 18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4월 30일 발행)에 실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김정은 경제노선의 3가지 본질적 특징 중의 하나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
- 논문은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매개 기업체들이 자체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을 창조적으로 진행하여 자기 단위의 발전은 물론,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을 위하여 온갖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함.
- 논문은 김정은 경제노선의 나머지 2가지 본질적 특징으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해나가게 하는 것"을 꼽음.

■ 기타 (대내 경제)

- 北, 전반적인 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 시작되었다고 소개(5.13, 중앙통신)
- 평양시 양어관리국, 대동강의 자연수역을 이용한 이동식 그물우리 양식 성과 선전(5.13, 중앙통신)
- 北, '박연 - 영통사 관광도로건설이 완공되어 개통되었다'고 보도(5.16, 중앙통신)
- 평안북도 및 황해남도 농촌들, 벼 모내기 주력(5.16, 중앙방송)
- 北, 박경애(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특수경제지대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5.16, 중앙통신)
- 양강도에서 중소형발전소 건설(2년 남짓 기간 10여 개소 준공)과 국토관리사업(리명수혁명사적지 주변 25만8천 그루 식수 등) 성과 선전(5.18, 평양방송·중앙방송)

다. 군사

●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북한군 일부 장성 진급 확인(5/1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발행한 김정은 부부의 전투비행기술 경대회 관람 사진에서 김명식 해군사령관과 운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상장(별3개)계급장을 단 모습이 포착됨.



- 박정천 포병사령관도 지난달 26일 김 제1위원장이 장거리 포병부대 포사격훈련을 참관한 사진에서 한 계급 오른 상장 계급장이 확인되었음.
- 연합뉴스는 김명식은 김정은 체제가 공식출범한 2012년 해군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중장 계급장을 달았으며 2년 만에 또 한 계급 진급해 탄탄대로를 걷고 있으며 윤동현과 박정천은 계급이 강등됐다가 복귀한 경우라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노동신문 "전사회적 책 읽는 기풍 확립해야"(5/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적들과의 싸움은 곧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며 "혁명적인 책을 많이 읽어야 사상정신적 노쇠와 변질을 모르고 애국충정의 한 길을 역세게 걸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무엇보다 김일상·김정일·김정은 노작(논문)과 '혁명역사'관련 서적 등을 우선적으로 읽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공분야의 최신과학기술지식을 얻기 위한 책임기를 통해 실무적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함.
-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오늘부터 나흘간 개최(5/12, 조선중앙통신)**
 -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12일 제3혁명 전시관에서 개막해 15일까지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개막식에는 김용진 내각부총리, 리룡남 무역상, 김성덕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무역 부문 간부들과 참가국 대표단·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함.
- **北, 전역에 전자도서관 '미래원' 건설 봄(5/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최근 완공돼 문을 연 자강도 전천군의 미래원을 소개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자도서관으로 훌륭히 개건된 전천군 미래원으로 많은 근로자와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전함.
- **캐나다 NGO, 8월 평양서 의학학술회의 추진(5/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 비정부기구(NGO)가 올해 여름 평양에서 서양·북한 의료진 등 1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의학 학술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함.
 - RFA에 따르면 캐나다 NGO '평양 프로젝트'는 오는 8월 1일부터 열흘간 김일성종합대학 산하 평양의학대학에서 '의학과 여성보건'이란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의를 개최해 산후 조리, 산모 사망률, 영유아 보건 등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북한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 연수와 전문가 교육도 이뤄진다고 전함.



- **北, 예술인대회 분위기 고양... "예술은 사상적 무기"(5/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이 평양역에 도착했다는 조선중앙통신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었으며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간부들이 평양역에 나가 예술인을 환영했다고 전함.
 - 신문은 또 이번 대회가 "우리의 문화예술을 선군혁명 위업수행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라고 소개하는 한편, 모란봉악단이 지난달 대흥단군, 해산시 등의 양강도 공연을 통해 주민에게 활력을 줬다며 사상일꾼들의 분발을 촉구함.
- **北 탁구지도자 2명 을 여름 인도서 기술전수(5/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탁구 지도자 2명이 인도 탁구협회의 초청으로 올해 여름 인도에서 탁구 선수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16일 보도함.
 - 인도 탁구협회는 2011~2012년 북한 탁구 대표팀 감독을 지낸 안중선과 청소년 대표팀 감독 출신의 김성한을 인도 청소년 탁구 선수 교육 프로그램에 초청했으며 이들 2명은 이번 여름 3개월 동안 인도 델리를 비롯한 12개 도시를 돌며 청소년 탁구 선수들에게 북한의 탁구 기술을 전할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함.
- **北 신문 "문화예술 혁명으로 제국주의 문화 짓부수자"(5/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개막을 맞아 문화예술 혁명을 통한 사상 무장을 강조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전투'를 독려함.
 - 신문은 문화예술은 식량과 무기를 대신할 수 있다며 "사상의 힘으로 진격로를 열어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투지를 안겨주는 문화예술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김정은 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문예사상과 이론,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 문화예술의 영재"라며 "지금이야말로 1970년대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역설함.
- **北 예술인대회 폐막... "문화예술 새 전성기" 다짐(5/17, 조선중앙TV)**
 -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 개최된 전국예술인대회가 17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6일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당은 현시기 문화예술 부문이 주저앉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문화예술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금 명백히 강조해 문화예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이번 전국예술인대회를 소집했다"고 밝힘.
- **北 모란봉악단 가수에 또 공훈배우 칭호(5/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라유미에게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7일 발표됐다고 라유미에 대해 "김정은 시대의 정신



이 맥박치는 노래들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18일 보도함.

● 北교과서 '업그레이드' 주목...그림으로 호기심 자극(5/18, 연합뉴스; 교육신문; 민족통신)

- 연합뉴스가 18일 입수한 북한의 주간지 교육신문 최신호(5월8일자)는 새 교과서에 대한 교육일꾼들의 반향이라며 교육 간부들이 기고한 글을 여러 건 실음.
-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의 전혜선 국장은 '세계적 수준의 우리식 교재'라는 글에서 새 교과서가 어린이와 학생이 친근하면서도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함.
- 앞서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도 지난 달 30일 기사에서 소학교 1학년 교과서의 사회주의 도덕과 김일성 가문의 일화를 묶은 부분에 그림이 많이 포함됐다고 전함.
- 교육신문과 민족통신의 내용을 종합할 때 새 어린이 교과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그림 등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한 것이 눈에 띄며, 어린 학생들이 친근감을 갖고 교과서를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北, 공사장 사고 이례적 보도...인민보안부장 사과(5/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13일 평양시 평천구역의 건설장에서는 주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함.
- 이어 생존자 구조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가 꾸려졌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선우형철 인민내무군 장령(장성) 등의 간부들이 지난 17일 사고현장에서 유가족과 평천구역 주민을 만나 위로·사과했다고 덧붙임.
- 최부일 부장은 이 사고의 책임은 노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받들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하고 "인민보안부가 언제나 인민의 이익과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위하는 진정한 인민의 보안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함.
- 김수길 평양시당 위원회 책임비서는 "원수님(김정은)께서 이번 사고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밤을 지새우셨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위간부들을 현장에 보내 구조작업을 지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세계 철새의 날(5.11·12)」 관련 '최근 나선일대에서 100여종의 철새들이 관찰, 세계 조류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北,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조 실천' 선전(5.12, 중통)
 - 리금철 선수(남자 자유형 42kg급),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슬링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5.12, 중통·중방)
 -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봉사학교(2~3년제) 개교식, 4월 28일 진행(5.13, 중앙통신)
 - 北, 2015년 9월에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주최 결정 보도(5.13, 중앙통신)
 - 제9차 전국 예술인대회, 5월 17일 최태복(폐회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4.25문화회관에서 폐막(5.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5월17~18일 평양에서 진행(5.18, 중앙통신)
 -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대회, 5월17일 평양에서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책임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5.18, 중앙통신)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고구려벽화무덤(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새로 발굴(돌칸흙무덤: 무덤길과 안길·죽음칸으로 구성된 외칸무덤) 보도(5.18, 중앙방송)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美, 무인기 사건 南입장 비호 말라"(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12일 판문점대표부 대면인 담화를 통해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미공동조사결과를 거듭 반박하며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비호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을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유엔군사령부가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정전협정 제2조 16항과 17항을 위반했다고 북측에 '확성기'로 통보했다면서 미국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때처럼 남한의 '확성기'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미국이 북한 영공에 수시로 정찰기를 진입시키고 '핵전략타격비행대로 '도발'을 일으키는 등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 유린, 위반하고 있다"며 "누구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떠들 한 조각의 체면이나 나격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함.



- **北** 외무성 "오바마에 격분 표시는 응당한 대응"(5/12,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신공격성 막말을 지적한 데 대해 "최근 우리 개별적 주민들이 오바마에 대한 격분을 표시한 것은 그가 남조선에 기어들어 존엄 높은 우리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중상한 데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고 12일 보도함.
 -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버림받은 국가', '비정상적인 국가' 등으로 헐담하고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언급했다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우리 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변화 거절한 美 정권의 말로는 어둡다"(5/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시론'에서 임기 후반에 들어선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한 '대결노선'의 도수를 높이며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어 "변화를 거절한 정권의 말로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며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대결을 격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北** 통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패권주의적 책동"(5/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위험천만한 패권주의적 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일 3국이 국방부 장관 회담 등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해 "아시아판 나토"를 조직하여 주변대국들을 견제하고 기울어져 가는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해보려는 불순한 전략"이라고 주장함.
- **北** 신문 "자위권 주장하는 日, 먼저 불벼락 맞을 것"(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선불(먼저 불벼락)을 맞을 수 있다"고 위협함.
 -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박에 가져다주는 것이 없는 매우 위험한 망동"이라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지난 세기 전반기보다 더 흑심한 전쟁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함.
- **北** 새 외무상, 중국보다 러시아 대사 먼저 만나...왜(5/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리수용 외무상이 취임 한 달 만에 '의례방문'으로 찾아온 류홍차이(劉洪才)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면담했다고 보도함.
- **北**, 日 집단자위권 추진 비난..."해외침략 첫 걸음"(5/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일본이 집단자위권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해외침략의 첫 걸음"으로 규정하며 일본이 '군국주의 우경화 책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함.



- 이어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연행과 성노예 범죄를 비롯한 과거 일제의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올바르게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정의를 거스르며 계속 군국화, 우경화의 길로 나간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국제사회의 적국으로 배격 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이란-北 핵 협력 언급' 이스라엘 총리 비난(5/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이 최근 유대인 정착촌 확장책동, 중동평화 회담 결렬 등으로 저들에게 쏘리는 국제여론 비난의 초점을 딴 데로 돌리고 중동지역에서의 팽창주의적 야망을 계속 추구하려는 얄은수"라고 주장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5월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스위스 대사(장-자끄 드 다르델) 신임장 접수(5.12,중통·중방)
- 리수용(외무상), 5월12일 駐北 러시아 대사와 담화(5.12,중통)
- 김영남, 5월 13일 駐北 터키대사(아르슬란 하칸 옥찰) 신임장 접수 및 담화(5.13,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5월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수단 대사(오마르 에이싸 아흐마드) 신임장을 접수하고 대사와 담화(5.14,중앙통신)
-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무관단들, 5월 16일 가족들과 강원도 원산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참관(5.16,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스페인 외무 및 협조성 대표단(단장: 에르네스토 드 주루에타 총국장), 5월 16일 평양 도착(5.16,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쿠바 주재 北 대사에 박창울 임명(5.17, 중앙통신)
- 北-방글라데시 '2014-2019년 문화교류계획서', 5월 1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조인(5.17,중앙방송·중앙통신)
- 박춘일 예멘 주재 北 대사, 5월 7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 (5.17,중앙방송·중앙통신)

나. 6자회담(북핵)

● 北 신문 "美 핵위협 대비 자위적 억제력 계속 확대"(5/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우리의 핵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비해 유지하고 더욱 확대해야 할 자위적 억제력"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포기를 거듭 촉구함.
- 신문은 "우리는 그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핵을 가지지 않았고, 허리띠를 조이며 다져온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대화에 목이 메고 관계개



선에 현혹돼 씨먹을 거래수단도, 흥정물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핵 및 미사일 시험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위협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무인기 도발 대북경고' 판문점서 화성기로 전달(5/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군의 한 고위관계자가 12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화성기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힘.
 - 뉴스는 또 유엔사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작년 3월 정전협정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사와 직통전화를 차단하겠다고 주장한 이후 지금까지 직통전화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군과 전화나 팩시밀리가 차단되어 있고 사람을 통해 직접 전달도 불가능해 기존 관례대로 화성기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 국방부 대변인 "北, 빨리 없어져야 돼" 강력 비판(5/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무인기 도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북한을 고강도로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었다고 보도함.
 - 김 대변인은 "북측이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를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포문을 연 뒤 북한을 "있을 수 없는 나라"라고 비판하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강력 비판함.
 - 김 대변인은 AN-2 위협에 대해서도 "AN-2는 1세대적인 무기로, 동구권에서 농약을 치던 항공기"라며 "북한은 그것을 가져와서 유사 시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해 많은 양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속도가 매우 늦어 넘어올 때 요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 北 신문, '통일대박론' 거듭 비난... "황금만능 논리"(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건달뱅이(양아치)나 좋아하는 '대박'이란 말을 통일이란 신성한 말에 갖다 붙인 것은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라고 지적함.
 - 이어 "통일을 경제문제의 종속물로 만드는 황금만능의 씩어빠진 논리가 깔린 통일대박론은 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한 조국통일 위업에 먹칠하는 반통일론"이라며 박 대통령을 "투전판에 나선 사기협잡꾼", "민족의



운명 문제, 조국통일 문제를 수관 위에 올려놓고 손익을 따지는 정치간상배"라고 비난함.

- 또한 "조국통일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도는 민족 분열을 피하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것"이라며 "박근혜는 통일대박론을 입에 올리기 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앞길을 열어놓은 6·15통일시대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국방위, 국방부 대변인 발언에 '전민보복전' 위협(5/1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국방위가 13일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날 '북한은 없어져야 할 국가'라고 한 발언을 "전면적 체제대결 선포"로 비난하며 '전민 보복전'을 위협했다고 전함.
 - 국방위는 이어 김 대변인 발언에 격노한 북한 주민들이 '서울타격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김 대변인 발언의 배후에 군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타산(계산) 밑에 김민석과 같은 밥통을 내세워 우리와의 전면대결의 불집을 터트려보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난함.
- **정부 "北국방위 전민보복전 위협 매우 유감"(5/14, 연합뉴스)**
 - 정부는 14일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북한 관련 언급에 대해 북한 국방위 원회가 '전민보복전'을 운운하며 위협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는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누구의 말을 시비하기에 앞서 그들 스스로 그동안 어떤 언행을 해왔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北, 우리 軍 서북도서 사격훈련에 '위협 메시지'(5/14, 연합뉴스)**
 - 해병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3일 서북도서에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으며, 우리 군의 훈련 도중 북한이 국제상선공통망(선박 핫라인)을 통해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사격하면 백령도를 잿가루로 만들겠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군 당국은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 전 북측에 훈련계획을 통보해왔고 이번에도 사격훈련 하루 전인 12일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매달 실시되는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에 사거리 40km인 K-9 자주포가 동원된 것은 올해 1월 사격훈련 이후 4개월 만이라고 뉴스는 전함.
 - 해병대 연평부대와 백령부대는 전날 K-9 자주포를 NLL 반대쪽인 서남 방향으로 사격하면서 사거리도 10km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상사격훈련 동안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 **北, 南정부에 국방부 대변인 '엄벌' 거듭 요구(5/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침몰해가는 박근혜 정권의 단말마적 발악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하게 비난함.
 - 논평은 "박근혜 정권이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하려거든 민족을 불행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대역죄인인 김민석을 당장 엄벌에 처하라"며 "그것이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남한 정부에 그를 엄벌하라고 거듭 촉구함.

- **北, 국방부 대변인 비난에 주민까지 동원 파상공세(5/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전쟁을 불러오는 악의 화근, 민족의 재앙거리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김 대변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을 여러 건 실음.
 - 평양시의 한 의사는 김 대변인을 '벌레만도 못한 놈' 등으로 표현하며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정당한 요구에 도전하다 못해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악랄하게 헐뜯는 폭언을 서슴없이 쫓아냈다(떠들었다)"고 주장함.

- **北 신문, 5·16 맞아 차대통령에 "독재 부활" 비난(5/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5·16을 '불법무도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또 "현 괴뢰집권세력에 의해 남조선에서 유신독재가 부활되고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 상태에 빠져 핵전쟁 위험마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라며 "박근혜야말로 온갖 악의 근원, 민족의 재앙거리"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세월호와 대비' 34년 전 여객선 구조 선전(5/12, 통일신보)**
 - 통일신보 최신회(5월10일 발행)는 '늑음의 날에 구원된 여객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980년 10월 북한이 동해상에서 여객선 '삼지연호'를 구조한 사건을 소개함.
 - 같은 면에서 최근 원산 해변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들어선 것과 세월호 참사를 대비하며 "북과 남의 어디가 천당이고 지옥이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 **北여성단체 "지방선거를 반정부 심판장 만들자"선동(5/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회가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



록 첫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정부의 책임으로 내세우며 이번 선거를 "반정부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여맹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여성이라면 감정도 있고 눈물도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를 찾아온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주지조차 않고 도리어 야수적으로 탄압했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고 통신은 전함.

● **北단체 "南정부 언론통제 심각...언론인 저항해야"(5/17, 연합뉴스)**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17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 패당이 여객선 침몰 대참사로 인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언론통제와 여론조작 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내외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내세워 침몰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들을 왜곡날조하는 한편 보도 기사들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하면서 저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만 내보내도록 단속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담화는 무인기 사건이 불거진 것도 박근혜 정부가 여론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어용보수언론'을 동원한 결과라며 "우리는 남조선의 양심적인 기자, 언론인들이 정의의 필봉을 더 높이 들고 박근혜 패당의 반인민적 악정과 동족대결 책동을 규탄단죄하며 살인마 무리들을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임.

● **北, 5·18 기념일 맞아 南에 '반정부 투쟁' 선동(5/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대중적 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군사파쇼 독재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항쟁"이라고 평가함.
- 이어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미국에 더욱 철저히 내맡기고 있으며 과거의 유신 파쇼독재체제를 부활시키면서 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성과마저 깡그리 말살하고 있다"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의 증축과 과적 등을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는 南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폐단과 비리, 황금만능의 사회현실이 초래한 재난'이라고 주장(5.14, 중앙통신)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미 기간 중 대북발언(4차 핵실험 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처, 가장 값비싼 대가 등) 관련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박OO 패당의 흉계'라며 '적대세력의 도전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포함한 자위적 조치로 대응해 나갈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고 주장(5.14,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유엔 '북인권사무소' 유치 움직임에 대해 '동족대결 광신자들의 도발적 음모'라며 '우리(北)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 흐리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압박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5.14, 평양방송)
- 국방부 대변인의 대북발언(5.12 정례브리핑) 관련 '남조선이야말로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미국의 식민지, 세습영지'라며 '이번 망발이 초래할 불벼락으로 없어지게 될 것은 청와대이고 썩어빠진 식민지체제'라고 위협(5.16,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팽목항 재방문(5.4) 시 발언(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알고 있다)에 대해 '유신 독재자를 잃은 자기의 추한 모습을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과 동일시 한 것으로서 그들에 대한 또 하나의 기만이며 범죄행위'라며 '가소롭고 역겨운 추태'라고 비난(5.17, 중앙통신)
- 청계산 '무인기 소동'(부서진 문짝 오인신고) 관련 "남사회가 '무인기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며 "이것이 바로 박OO 패당이 조작해낸 무인기 사건의 '北 소행'설에 의한 피해망상증"이라고 주장(5.17, 중앙통신)
-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北 체제 및 인권·자유' 언급은 "우리(北)를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최악의 통치위기에 서 헤어나보려는 불순한 목적"이라고 비난 지속(5.18, 중앙통신·노동신문)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핵실험 임박 징후 없어" <38노스> (5/14,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13일(현지시간), 지난 9일 촬영된 위성사진 판독 결과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주 후에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음.
- 38노스는 "핵실험을 계획했으나 실행할 의도는 없었을 수 있고, 한미연합훈련이나 한국과의 관계악화를 고려할 때 핵실험 임박을 시사해 시선을 끌려는 조치였을 수 있으며, 또한 핵실험 계획 후 막판에 포기했을 수 있다"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38노스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 모두 분석상의 결함 탓에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38노스 자체도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핵실험이 이뤄지는 만큼 만족할만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음.

나. 미·북 관계

● '北 막달' 후폭풍...워싱턴서 커지는 대북 비판론(5/13,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막달' 이후 미국 정부는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학계와 싱크탱크에서는 극도의 대북 불신과 혐오감을 드러내며 김정은 정권의 '막나가는 행보'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대북 비판론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음.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와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는 12일(현지시간) CNN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핵위기를 고조시키고 인권위반을 자행하는 살인적인 정권"이라며 "김정은을 문명사회의 위협으로 간주해야 할 시점"이라 비판했음.
- 데니스 헬핀 존스홉킨스대 연구원도 '위클리 스탠더드' 기고글에서 "인종주의적, 성차별적 폭언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집착이 북한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삼가게 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에 화살을 돌렸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北 4차 핵실험하면 강력 제재 전망<VOA>(5/13, 연합뉴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2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추가 핵 도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은 유례가 드문 고강도 제재에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고 보도했음.
 - 알렉산더 네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중국이 식량과 연료 제공 중단 등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했고, 스인홍(時朔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지지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라 예측했음.
 - VOA는 북한의 연이은 돌출행동에 중국이 당혹감을 느끼면서 중·북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입장이 종전에 비해 강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김정은의 핵 야욕을 사전에 저지할 만큼의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라. 일북 관계

- **일본, 8월 아세안회의서 北과 외상회담 검토<교도>(5/1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오는 8월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에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경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의 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음.
 - 일본은 자국민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서 일·북 양측은 지난 3월30~31일 중국 베이징에서 16개월 만에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재개했음.
 - ARF는 북한과 일본 외무상이 나란히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 국제회의로, 지난 2004년 ARF 때 백남순, 가와구치 요리코 당시 양국 외무상이 양자회담을 한 바 있으나 북한이 ARF에 앞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양자회담은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1970년 日요도호 납치범, 북한서 여전히 '후한대접'(5/16,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16일, 지난달 말 북한 현지를 다녀온 인사의 전언과 사진을 소개하며 1970년 일본 적군파(赤軍派)의 여객기 납치 사건인 '요도호' 사건에 관여한 일본인들이 월북한지 44년이 흐른 지금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들은 대동강 주변에 조성된 운동장과 텃밭, 게스트하우스 등이 갖춰진 '일본 혁명촌'이라 불리는 일본인촌에 살고 있으며, 일반 주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NHK, CNN 등의 위성방송 시청과 인터넷은 할 수 없지만 이메일 송수신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파 9명이 일본항공(JAL) 요도호를 공중 납치한 사건으로, 납치범들은 김포공항에서 탑승객들을 풀어준 뒤 아마무라 당



시 운수성 차관을 인질로 잡은 채 북한에 눌러 앉았으며,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일본 송환을 북한에 요구해왔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클래퍼 美국가정보국장 방한...북핵문제 협의(5/14, 연합뉴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4일,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면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을 비공개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30여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안보관련 참모진들이 배석한 가운데 주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준비 동향 및 한반도 안보정세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조짐을 비롯해 영변의 핵단지 활동 등에 관한 정보 교환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음.
-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를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클래퍼 국장은 지난 1월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영변 핵단지 우리늄 농축시설 규모 확충'과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밝힌 바 있음.

나. 한중 관계

● 중국, 광복군기념비 건립 공식 확인..."역사 기억해야"(5/12,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광복군 기념비 관련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준공됐고 (조만간) 제막식이 있을 것"이라 밝혀 우리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주둔지 기념비 사업이 사실상 완료단계에 있음을 공식 확인했음.
- '(예상되는) 일본측 반발에 대한 입장' 질문에 중국의 '외국기념시설물 건립 규정'에 따라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역사를 명확히 기억해야 더욱 훌륭한 미래가 있다"고 답변했음.
- 이번 기념비 설치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시안에서 자오정용(趙正永) 산시성 당서기, 리우친젠(婁勤儉) 성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설치 사업의 허가를 요청함으로써 본격화됐음.

● 왕이 中외교부장 26일 방한할 듯...정상회담·북핵 협의(5/16, 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은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26일부터 28일까지 방한해 박근혜 대



령 예방,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의 일정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중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차단을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 개최일정과 의제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시 주석의 방한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방한이 성사될 경우 주석 취임 뒤 첫 한국 방문으로, 아직 중·북 최고지도부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에도 적지 않은 메시지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日정부, 교과서 출판사에 독도기술 강화 '압박'(5/12,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1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는 26~29일로 예정된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신청 접수 후에도 2개월 동안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관련 기술을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22일 각 출판사에 통지했다고 보도했음.
-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각 출판사들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관련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는 "해설서 개정 후부터 검정신청까지의 시간이 짧기에 각 출판사에 해설서 취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위한 것"이라 했으며, 앞서 문부성은 지난 1월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명시한 바 있음.

● 韓日 국장급 협의 재개, 軍위안부 문제 견해차 '여전'(5/15, 연합뉴스)

- 지난달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첫 한일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의 기본 입장이 확인된 이래 15일 재개된 협의에서 본격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견해차만 확인하며 마무리됐음.
- 이날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은 일제 강점기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다음 협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일본은 "유익한 논의를 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



- **日 집단 자위권 행보 본격화…한반도 영향 주목(5/16, 연합뉴스)**
 - 15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행보가 공식화되면서 "한반도 관련 사항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는 한일 양국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외교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등의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유사시에는 우리 정부의 선택의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 전개에 따라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 규정을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한국 정부가 역지력의 수단으로 활용 또는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라. 마중 관계

- **케리 미국무 "中 남중국해 공격적 행동' 우려"(5/1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K. 산무감 싱가포르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최근 베트남과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영유권 분쟁을 지적하며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케리 장관은 "미국 정부 등은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한 행동강령(COC)이 제정되는 것을 보고 싶고, 이 문제가 직접적 대치나 공격적 행동이 아닌 해양 관련 법규나 중재,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 한편, 베트남 언론은 이날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 도에서 진행 중인 석유 시추 현장에 전투기까지 동원해 베트남 초계함 주변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으며,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에 '현장 무장력 강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음.
- **글린 데이비스 "中과 모든 종류의 北비상사태 논의"(5/14, 연합뉴스)**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현지시간), "북한 비상사태 문제는 중국과의 협의에서 때때로 제기되는 주제"라면서 "중국 정부와 모든 종류의 비상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대(對) 한반도 정책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로,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미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미·중 양국이 북한 비상사태에 대해 공식 외교채널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데이비스 대표는 "중국은 북한문제를 정세 안정의 관점에서, 우리는 안



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과 도발적 행동이 계속되면서 미·중의 인식이 서로 융합되고 있으며 대북 접근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中 군참모장, 펜타곤 회견서 美외교정책 정면비판(5/16,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광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마틴 덴프시 미 합참의장과의 회동 후 베트남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석유 시추와 시추 장비 보호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 또한 미국을 향해서는 "중국과 베트남 간 긴장에 대해 객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중 간 관계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이 지역분쟁을 부채질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 이는 미국이 중국의 석유 시추 강행을 '도발 행위'라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 수뇌부가 미국의 심장부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남중국해 문제는 물론 외교 정책 전반까지 정면 비판한 것임.

마. 마일 관계

- **美, 日 집단 자위권 추진 '환영·지지' 재확인(5/15, 연합뉴스)**
 - 오바마 행정부는 아베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 계획을 공식 발표한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판으로서 미·일 동맹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 즉, 동북아 역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통해 미·일간 안보부담을 적절히 공유함으로써 안보능력의 '누수'를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또한 국내외적으로 회의론에 휩싸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구체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임.
 - 미국 일각에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이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해 동북아 정세에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계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분명한 역사인식'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음.

바. 마러 관계

- **우크라 사태 美-러 갈등, 우주 공간으로 비화(5/13, 연합뉴스)**
 - 13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2020년 이후 국제우주정거장(ISS) 운영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밝혀 우크라이나 사태로 빛는 미·러 간 갈등이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또한 미국이 러시아 위성항법시스템 글로나스(GLONASS)의 미국 내 감시국(위성으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 오차를 바로 잡아주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용 기지)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 위성항법시스템의 러시아 내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음.
 - 러시아는 지난 2012년 미국 정부에 8개의 감시국 설치를 요청했지만 이를 허용하면 미국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러시아 무기체계의 정확성 향상 등의 우려로 인해 미 정보기관과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이 반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
- "러軍,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경에"...美, 위성사진 공개(5/14, 연합뉴스)
- 유럽의 유로뉴스 등은 13일(현지시간), 나토 주재 미국 대표부가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있는 러시아 장갑차와 헬기들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됐던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켰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고 보도했음.
 -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를 방문한 디디에 부르칼테르 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과 회담 뒤 "우크라이나 접경의 러시아 군대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군대를 철수했고 그들은 현재 본대로 복귀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미 대표부는 지난 3월과 지난 12일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군의 모습에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 이는 "러시아군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경에 포진해 있다"는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유로뉴스는 덧붙였다.

사. 중일 관계

- 일본 정부 "중국 법원 선박압류, ICJ제소 생각 안 해"(5/14, 연합뉴스)
-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의 선박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 사안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음.
 - 중국 상하이시는 미쓰이 상선이 전쟁 중 사용한 중국 배를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 엔을 배상해야 한다는 상하이 해사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달 19일 미쓰이 상선의 선박을 압류한 바 있음.
 - 일본 정부는 "전쟁 중 행위에 관한 배상 문제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모두 해결됐다"는 견해에 따라 이 사안의 ICJ 제소 검토를 전망했으나, 지난달 23일 미쓰이 상선이 배상금과 이자를 합해 40억 엔을 공탁한 뒤 법원이 압류를 해제해 사태가 일단락됐음.
- 중국인 작년 일본비자 13% 감소..."영토분쟁 영향"(5/14, 연합뉴스)
- 지난해 일본 외교 공관에서 중국인들에게 발급해준 비자는 모두 97만



2천 건으로, 2012년에 비해 1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4일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음.

- 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양국의 영토분쟁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일본이 2012년 9월 '센카쿠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같은 해 9~12월 비자 발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4%나 급감한 데 이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중국인은 지난해 일본이 외국인에게 발급한 비자 가운데 52%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최대 방문객이지만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일본 정부는 비자 발급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소득 수준의 기준을 낮추는 등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있음.

● 시진핑 "중화민족 피엔 침략유전자 없다"...日우회비판(5/16,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국제우호대회 및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중화민족은 대외침략과 확장이 아닌 대외교류를 적극 추진했으며 강토를 개척하는 식민주의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또한 "중국은 600여 년 전 정화(鄭和)가 함대를 이끌고 3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도 한 치의 토지도 점령하지 않고 평화 우의의 씨를 뿌렸다"고 강조했다며 "중국의 근대사는 재난의 역사이자 비참하고 굴욕적인 역사였다"며 일본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음.
- 이는 이날 아베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 표명한 날이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움직임과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됨.

아. 중러 관계

● 시진핑 · 푸틴 3개월 만에 재접촉...안보현안 공조예고(5/13,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1일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혀 '신 밀월기'를 구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긴밀한 '공조모드'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음.
- 푸틴 대통령의 방중 시점이 동중국해 혹은 남중국해에서 진행될 예정인 중·러 해군 합동군사훈련 시기와 대체로 맞물리기 때문에 양국이 직면한 최대 현안인 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어느 수준의 공조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을 끄는 대목임.
- 또한, 미국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중·러 연합훈련과 푸틴 대통령의 방중 배경에는 대미(對美) 공동 견제라는 포석이 깔렸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시 주석은 이번 CICA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시아 신안보관'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연출할 예정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회의 참석은 상당한 측면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러 군사훈련, 동중국해 통제강화에 초점<전문가>(5/16, 연합뉴스)**

-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 리제(李杰) 연구원은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오는 20~27일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진행되는 '해상협력-2014' 합동 군사훈련은 중국의 동중국해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 전망했음.
- 그는 이번 훈련에 대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함정 수를 줄인 대신 2척의 대형 탱크 상륙용 함정, 잠수정 2척을 동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잠수정 수색과 유사시 공격력 그리고 도서(島嶼) 공격 관련 작전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등 통제력을 강화하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며, 리제는 "다른 강공이 있는 국가에 두려움을 줄 것"이라고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음.

자. 기타

● **인도네시아,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창설 제안(5/12,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통신은 12일,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미안마에 열린 제24차 아세안정상회의 연설에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ASEAN) 정치안보 공동체' 창설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 유도요노 대통령은 "정치안보 공동체는 국제법에 맞춰 평화를 지키고 정치적 도전과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이는 남중국해 분쟁은 물론이고 중·일 간 영토분쟁과 남북한 갈등 등 동아시아 안보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 이는 내년 말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AEC가 출범하면 인구 6억, GDP 규모 1조9천억 달러의 거대 경제공동체가 됨.

● **남중국해 분쟁 놓고 인도-중국 간 성명전(5/13, 연합뉴스)**

- 시에드 악바루딘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9일, 남중국해 원유시추를 추진하는 중국과 이에 반발하는 베트남 간 분쟁과 관련해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고 인도 언론이 13일 보도했음.
- 이에 중국 외교부는 "최근 상황에 대해 인도인들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O)에 따라 중국과 ASEAN은 공동인식을 지닌 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음.

- 일각에서는 중립주의 외교노선을 표방하는 인도가 남중국해 문제 관련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성명을 낸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및 베트남 입장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중국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아베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하도록 헌법해석 변경"(5/15,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15일,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요청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표명했음.
- 이는 현행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의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협법 제9조를 정식 개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임.
- 보고서는 집단 자위권의 행사 요건으로, ①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 ②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③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④총리의 종합적인 판단과 ⑤국회의 승인을 거쳐 ⑥제3국의 영해 등을 자위대가 통과할 시에는 허가를 얻는다는 6가지를 제시했음.
- 또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로는,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주변 유사사태시의 외국선박 검사' 등을 꼽았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FAO "북, 올해 쌀 확보량 작년 수준"(5/12, 자유아시아방송)
 - 식량농업기구(FAO)는 6개월마다 발표하는 '식량전망보고서(Food Outlook)'에서 올 가을 북한의 쌀 수확량을 지난해와 비슷한 190만 톤으로 전망했으며,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과 돼지고기 등의 육류 생산도 지난해 수준으로 내다봤음.
 -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9일 공개한 보고서는 북한이 내년 초까지 수입하겠다는 10만 톤을 포함하면 총 200만 톤의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추산함.
 - 보고서는 올해 추수철부터 내년 여름까지 일 년 동안 북한 주민 한 사람당 쌀 소비량을 약 68kg으로 추정했는데,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의 평균인 주민 한 사람당 쌀 61kg을 소비한 것과 비교하면 7kg 증가했음.
 - 북한이 확보할 옥수수는 230만 톤 수확과 20만 톤 수입을 합산해 지난해의 일 년 확보량 250만 톤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270만 톤보다는 20만 톤 감소했음.
 - 그러나 보고서는 조사 대상인 아시아 18개국 중 북한을 쌀이 가장 부족한 나라로 지목하면서, 올 연말을 기준으로 북한은 쌀 10만 톤을 비축해서 이라크와 함께 가장 적은 쌀을 비축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한편, 북한이 내년 여름까지 확보할 돼지고기는 약 11만 5천 톤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북한의 축사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도축해서 생산할 11만 3천 톤에 수입으로 확보할 2천 톤을 더한 것임.

- 북한, 인민반 교양서 "탈북자 南서 신문 이불삼아..."(5/12,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최근 인민반 회의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꽃제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당국이 거짓 선전까지 동원해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려 나선 모양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같은 당국의 선전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당국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함.
 -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보위당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내주던 (임대)아파트와 정착금도 이제 다 떨어졌다고 선전했으며, 탈북자들이 남한에 가면 합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서 싸움이 끊이질 않고, 합숙소를 탈출해 집도 없어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선전함.
 - 소식통은 이어 "회의에서 최근 남한과 통화, 탈북 방조, 탈북자 송금 등으로 보위부에 체포돼 처벌을 받은 주민들의 사례가 언급됐다"면서 "탈북을 계획하고 있거나 탈북할 결심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야 한다" '남의 땅에 가서 꽃제비가 되느니 제 땅에서 빌어먹는 것이



한결 편하지 않은가'고 말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으로, "일부 주민들은 '꽃제비처럼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은 어디서 나 보내는가'며 '처벌 사례에서 말한 것처럼 송금 처벌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탈북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돈이지 않는가'고 반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 농촌지원 위해 주민이동 통제(5/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농촌지원을 구실로 일체의 주민이동을 통제하면서 장마당 운영시간도 제한하고 있어, 때때끼(하루별)로 살아가는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
- 농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데 대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5월 3일 방침(구두지시)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장마당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여러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함.
- 10일 연력이 닿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농촌지원을 위해 일체 주민 이동이 금지됐다"며 "외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4월 16일부터 농촌지원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장마당을 보게 했는데 최근 다시 중앙의 지시가 내려와 장마당 운영시간을 저녁 6시에서 밤 9시까지로 대폭 축소했다"고 언급했음.
- 평소 북한의 장마당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했는데 농사일에 노력을 집중하기위해 장마당 운영을 저녁시간만 허용하고 있으며, 길거리 곳곳에 보안원들과 노동자규찰대가 진을 치고 농촌동원에 나가 지 않은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장마당 운영시간을 제한 한 건 농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는 김정은 제1비서의 방침에 근거해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내린 조치라며 "한마디로 밥을 뜯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른이고 다 농촌에 나가라"는 것이 조직지도부의 지시내용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소식통들은 장마당 운영시간을 제한하면서 때때끼로 살아가는 장사꾼들을 비롯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강조함.

● "김일성 생일 후 쏟아져 나오던 私事여행자 급감"(5/13, 데일리NK)

- 북한에서 그동안 김일성 생일(4월 15일) 이후 중국으로 사사(私事)여행자들이 대거 몰려나왔지만, 올해엔 그 숫자가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사사여행자를 통해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국 방문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부 소식통이 전했다.
-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은 13일 "2월에는 16일 장군님(김정일) 생일이 있고 3, 4월에는 수령님 생일 준비로 출국을 못 하게 막아 시간이 지나



기만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당국의)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해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모내기전투'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 밖에 나가 돈을 구해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일부 주민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고 소개했음.

- 그동안 김일성 생일이 끝난 후 중국에 사사여행 나온 북한 주민은 하루 평균 적게는 40~50명, 많게는 100명 정도였으나, 올해엔 김일성 생일이 끝났는데도 중국 단둥(丹東) 해관 기준 하루 평균 10명 정도밖에 안 됨.
- 소식통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외부와의 핸드폰 통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중국 방문 주민들을 통한 내부의 기밀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민감한 소문 등이 유포될 것을 우려해 출국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중국 단둥의 대북 소식통 역시 "4월 중순 이후 조중우의교를 통해 버스로 넘어왔던 조선(북한) 방문자들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면서 "화교(華僑)를 제외하면 한 달 동안 젊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60, 70대 노인들만 나왔다"고 설명했다.
- 해당 소식통은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은 내보내지 않는 반면 보위부 요원들은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어 "쫓기는 주민보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라고 지적함.

● 북한, '춘궁기'인데도 쌀값 안정세 보이는 이유는?(5/15, 데일리NK)

- 북한에서 4, 5월 '춘궁기(春窮期)'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엔 시장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들이 알려왔음.
-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5월 현재 평양과 평안북도 신의주, 양강도 해산의 쌀값은 각각 3700원, 3850원, 3900원으로, 이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 또한 북한 빈곤층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 가격도 하락해, 현재 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은 전달과 비교해 500원가량 하락한 800~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춘궁기임에도 시장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농사철을 맞아 영농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작업반별로 쌀을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시장에 쌀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임.
- 또한 북한에서 1달러당 환율이 4월에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5월 현재 7500원 정도(평양, 전달비 160원↓)로 소폭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이면서 환율 안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평양은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평양 주민들에겐 지난달에도 초에 보름치를 배급한 이후 중순에 다시 보름치가 공급됐음.
- 다만 올해 북한의 봄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시장 물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음.



- **북 중앙당, 지나친 과제로 주민 흑사(5/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중앙기관들이 지방 행정조직들에 지나치게 많은 과제들을 내려 먹이면서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도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강도의 한 행정기관 간부소식통은 "농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고서 한쪽으로는 철도감시시설, 살림집을 비롯한 중앙의 건설과제들이 연이어 내려오고 있다"고 지방행정기관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함.
 - 그는 중앙기관들마다 모두 당의 방침 운운하며 자신들이 내려 보낸 과제부터 수행하라고 독촉하는데 "도무지 어떤 과제에 먼저 집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지방간부들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새벽 5시부터 철길정리 작업에 나갔다가 아침출근을 해서는 집단적으로 주변농장에 지원을 나간다"며 "이 외에도 살림집 건설을 위한 자갈과 모래를 세대당 각각 2입방씩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 특히 소식통들은 내각 경공업성과 보건성, 건설감독성이 아무런 지원도 없이 술한 자금이 요구되는 '현대화 사업'들을 마구 강요하면서 지방행정기관들에 큰 혼란과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언급했음.
 - 뿐만 아니라 농업성과 국토환경성, 민주여성동맹은 수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들을 타산 없이 내려 보내 지방행정기관들은 행정기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앙기관들마다 내려 보내는 이러한 과제들은 결국에는 모두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과거 김정일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과제들이 내려오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한결같이 주장했다.

2. 북한인권

- **영국 보고서 '북한 반인도적 범죄' 고발(5/13,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서 13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보고서 두 편이 발간됨.
 -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는 13일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Unparalleled and Unspeakable: North Korea's 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보고서를 발간함.
 - 보수당의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은 서문에서 지구상 가장 박해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폭넓은 행동을 촉구하는 영국 의원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그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보차단의 벽을 허무는 등 반 세기 넘게 계속되는 북한 주민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음.



- 보고서를 작성한 보수당의 벤 로저스 세계기독교연대 동아시아팀장은 BBC 한국어방송 개시, 현재 진행중인 영어교육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제시했음.
- 이번 보고서는 2011년 10월 북한의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를 초청해 증언을 들은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실시한 북한의 인권유린 참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았음.
- 또한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한 데이빗 앨튼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의장,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 등 여러 명의 탈북자의 증언, 그리고 한국과 영국, 미국 등의 인권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임.
- 국제 앰네스티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30주년을 맞은 13일 발간된 보고서 (Torture in 2014: 30 Years of Broken Promises)에서 북한 수용소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에게 심각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음.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북한 고문 실태 매우 심각'(5/13, 미국의 소리)

- 국제 인권단체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3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고문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특히 북한의 고문 실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
-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전세계적인 '고문 중지-Stop Torture' 캠페인을 시작하고,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이 지난 1984년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한 지 30년이 됐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국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음.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특히 북한과 중국을 고문이 만연한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했으며, 첫 번째 문제로 북한의 잔인한 강제수용소를 언급했음.
- 올로프 브름크위스트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은 세계에서 고문을 자행하는 주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들이 있고 이곳에서는 고문이 일상화 돼 있다고 전함.
- 브름크위스트 대변인은 특히 어린이 등 수감자들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 극도로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하며, 매우 가혹한 고문들이 처벌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를 인권 유린의 주요 가해기관으로 지목했음.
- 브름크위스트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모든 형태의 고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문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을 촉구했음.

● 데이비스 "북 핵문제 외 인권도 중요"(5/1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문제 못지않게 인권개선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의 핵문제 관련 논란이 잦아든 후 미국은 과연 북한 2천500만 주민의 인권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열악한 이들의 인권 상황을 제대로 조명했는지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음.



-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당국에 인권 유린을 중지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 측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조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영국 의원들 'BBC 대북 라디오방송 시작해야'(5/14, 미국의 소리)

- 영국 하원에서 13일 보수당 소속 앤드류 셀루스 하원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국제방송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여러 의원들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음.
- 셀루스 의원은 BBC'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 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 뿐아니라 외부세계에도 이익이라고 말했음.
- 앞서 BBC' 는 지난 해 영국 의회 대북정책협의회의 요청을 계기로 북한 주민을 겨냥한 한국어 방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북한 내 국제 라디오 방송 청취자가 적다는 점과 한국의 방송법이 외국 방송사의 직접 송출을 금지한 규정 등을 이유로 대북방송은 북한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
- 이에 대해 보수당 소속 피오나 브루스 의원은 북한에서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한국에서의 송출이 불가능하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다며 정부와 BBC' 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날 토론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휴고 스와이어 외무부 부장관은 BBC' 방송이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독립적인 언론매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음.
- 또한 스와이어 부장관은 BBC' 가 지난 해 의미 있고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 대북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며, 하지만 지금도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함.
-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복송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유엔 본부 앞에서 '핵 없는 한반도' 기원 거리연주회(5/15, 연합뉴스)

- 미국 보스턴 소재 버클리 음대 소속 한인 학생이 주축이 된 연주단 8명은 1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유엔 본부 앞에서 '사랑과 평화 거리음악회'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 '북한 인권 신장' 등을 기원하는 거리 음악회를 열었음.
- 연주에는 북한 핵문제, 이산가족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염려하는 외국인 음대생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음.
- 연주단은 오후에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복송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유엔 중국대표부 앞에서도 같은 연주회를 열었음.



- 연주단은 각각의 연주를 마친 뒤 "핵무기없는 한반도, 이산가족 만남,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낭독했음.
- **"北인권 침묵 깬 유엔, 이제 정치범수용소 폐지 나서야"(5/15동아일보)**
 - 국가인권위원회, 베를린자유대, 화정평화재단은 공동으로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 심포지엄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소냐 비세르코 COI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유엔 북한 인권 조사 활동성과 및 전망 △해외 체류 탈북자 인권 상황 및 보호 방안 △서독의 동독 인권 문제 대응의 시사점을 주제로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음.
 - 참석자들은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름 붙이고 창피주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후속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서독 분단시절의 인권보호 경험을 살리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EU, 유엔 COI 등 북 인권 논의(5/15,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유럽기구(EIDHR)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올해로 네 번째 연례 인권토론회를 개최했음.
 -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반 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이 행사에 연사로 초대된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분쟁지역이 아닌 북한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했던 배경을 설명했음.
 - 또한 세계기독교연대,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인권단체와 한국, 일본 등 40여 개 단체가 연대한 '반 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와 같은 국제적 협력을 통한 인권운동의 효율적인 방안이 논의됐음.
- **김정은, 민심 얻으려 고아원 집중 부양(5/16, 자유아시아방송)**
 - 민심잡기에 나선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중등학교, 즉 고아원을 부양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속받지 않고 살던 꽃제비들이 고아원을 탈출해 골머리를 앓고 있음.
 - 최근 중국에 나온 남포시의 한 주민은 "당에서 고아를 책임지라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물고기와 당과류, 흰쌀도 공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초 평양시 고아양육시설인 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한 뒤, 거리를 떠도는 꽃제비들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 전역의 당기관들에서는 중등학교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역전과 장마당을 떠도는 꽃제비들을 전부 수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함.
 - 강원도 원산시 일대에 있는 1월 8일 수산사업소가 물고기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월 8일 수산사업소는 김 제1위원장이 육아원과 애육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산사업소를 건설하라고 북한군 후방중국에 과제를 주어 건설된 수산기지임.

- 북한과 연락하고 있는 남한의 탈북자 단체도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원의 가장 큰 과제는 민심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 취약 계층인 고아 문제를 해결하고, 노약자 부양에 착수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남포시의 주민은 "당에서 중등학교를 책임지고 돌보고 있지만, 꽃제비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그 원인으로 꽃제비들에게 공급을 잘해주어도 습관상 자유주의를 원하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중등학교를 탈출해 역전과 장마당을 떠돌고 있다고 설명함.

● 독일서 독일인 주축 첫 북한인권단체 출범(5/16,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의 인본주의를 위한 정책연구소 지오다노브루노재단 (Giordano-Bruno-Stiftung)의 지원으로 독일인을 주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사람'이 지난 15일 출범했는데, 독일에서 한국계가 아닌 독일인이 중심이 된 북한인권 단체가 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니콜라이 슈프리켈스(Nicolai Sprekels) 공동대표는 어릴 때 한국에서 독일로 이주해 독일시민이 된 이 단체의 이본 영희 보르만(Yvonne Young Hee Bormann) 공동대표등 소수의 한국계 회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회원이 독일인이라고 전함.
- '사람'은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독일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 독일정부와 유럽연합이 북한인권 개선에 개입하도록 독일 내 한인단체 '한국을 위한 마음(Herz Fur Korea)'과 협력하기로 했음.
- 슈프리켈스 공동대표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영국의 '북한인권을 위한 유럽동맹'은 물론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인권단체들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임.

3. 탈북자

● 통일부, 탈북자 취업박람회 전국 순회(5/12, 자유아시아방송)

- 탈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방 정부가 비정기적으로 열던 탈북자 취업박람회를 통일부가 탈북자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음.
- 취업박람회는 일부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등 북한이탈주민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기관이 후원하여 구인기업과 구직 탈북민 간의 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첫 번째로 부산에서 개최한 것을 포함해 올해 6차례에 걸쳐 전국의 대도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北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5/12, 연합뉴스)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됨.
- 200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간첩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홍 씨의 신청을 받아들임.
- 앞서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음.
- 반면에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음.
-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음.
- 재판부는 수사기록 분량이 3천~4천 쪽에 달하고 신청된 증인이 20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연속해서 재판을 열기로 했으며, 통상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하루, 길게는 이틀만에 마무리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임.
- 재판부는 19일 오전 11시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할 계획임.
- 북한 보위사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되었음.

● 링크, 올 1~3월 탈북자 17명 구출(5/1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에 기반을 둔 대북인권단체 링크(LiNK)의 박석길 정보전략부장은 올 3월 말 까지 중국 내 탈북자 17명을 구출하면서 총 231명의 탈북자를 구출했다고 밝힘.
- 링크는 2010년 '탈북자 100명 구출운동(TheHundred)'으로 본격적인 중국 내 탈북자의 제3국 정착지원을 시작했으며, 2006년 9명의 탈북자를 구출한 것을 포함해 2010년 22명, 2011년 58명, 2012년 40명, 지난해 85명의 중국 내 탈북자 재정착을 도움.
- 특히 지난해 인터넷 사회적 연결망 등을 이용한 '북한과의 가교(Bridge to North Korea)'라는 탈북자구출기금 마련 운동을 벌여 한국,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탈북자 구출운동을 지원하게 됐음.
- '북한과의 가교' 운동은 북한 독재체제에서 굶주림과 강제노역,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줄 수 있도록 탈북자들이 가교 즉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임.



4. 이산가족

- **북한, 재미 한인에 가족 유골 반출 허용(5/15, 미국의 소리)**
 -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유골 반출을 허용함.
 - 미국에 거주하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문재 박사의 누나 박경재 씨는 6.25전쟁 때 서울에서 북한 인민군 협주단 가수로 차출되었다가 유엔군의 서울 수복 후 북진하던 1951년 인민군에 이끌려 그대로 북한으로 넘어가, 이후 폴란드와 체코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북한 피바다가극단 전속 소프라노로 활동했음.
 - 남매는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PBS가 남북한 이산가족의 사연을 주제로 한 기록영화를 제작하면서 북한 당국과 연결되어 생사 여부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지난 1995년 44년 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났음.
 - 남매는 이후 1년에 한번씩 평양에서 만났으나, 누나 박경재 씨가 재작년 80살의 나이로 사망함.
 - 박문재 박사는 10년 넘게 의료 봉사를 하며 인연을 맺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올해 초 누나 유골의 일부라도 미국으로 옮기고 싶다는 소망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음.
 - 북한은 뜻밖에도 지난 3일 방북한 박문재 박사에게 유골 반출을 허가해 주었고, 박 박사는 북한에 사는 누나의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절반 가량의 누나의 유골을 얻어 북한에서 미국으로 옮김.

- **미 랭글 의원 "북한 이산가족 유골 반출 허용 환영"(5/17, 미국의 소리)**
 -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유골 반출을 허용한 데 대해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 미 연방 하원의원이 16일 환영의 뜻을 표명함.
 -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인 찰스 랭글 의원은 80살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서 누나의 유골을 수습해 올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밝혔음.
 -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던 랭글 의원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거듭 상기시키며,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60년 넘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비극을 겪고 있다고 지적함.

5. 남북자

- **"일본, 8월 아세안회의서 北과 외상회담 검토"〈교도〉(5/1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를 즈음해 현지에서 북한과 외무장관 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음.
 - 통신은 일본 정부는 ARF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경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의 회담을 타진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함.

- 일본은 자국민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다만, 북한이 ARF에 앞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일간 양자회담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일자위권보고서, '당사국 동의 예외 상황' 규정(5/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파악됨.
- 간담회는 지난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외 일본인 보호와 구출을 위한 자위권 발동과 관련, "영역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재외 자국민의 보호, 구출은 국제법상 소재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한 침해 배제하는 의사 또는 능력을 갖지 않고, 해당 외국인의 신체, 생명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침해가 있어 다른 구제의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자위권의 행사로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명기했음.
- 산케이 신문이 간담회 관계자를 인용해 이 문구가 의도하는 것은 "자위대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음.
- 보고서 내용은 한반도 유사시 헌법 상 남북한 모두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위대가 북한에서 일본인 납북피해자를 구출하는 작전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간담회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을 염두에 둔 듯 일본인 납북자 구출을 위한 작전의 경우 "한국의 동의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함.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호주, 280만 달러 대북식량지원(5/13, 자유아시아방송)

- 호주 정부는 지난 주 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으로 미화 280만 달러 상당의 3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세계식량계획에 기부했다고 밝힘.



- 호주 국제개발청(AusAID) 제나 핸드 대변인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 2013회계연도에 280만 달러를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5월 초에 세계식량계획과 기부를 위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전함.
 - 또한 국제개발청 관리들이 지난해 말 북한을 방문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의 분배와 감시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원 후 분배 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 **캐나다, 1년간 373만 달러 대북지원(5/14,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국제개발청(CDIA)의 니콜라스 도이어 대변인은 지난달 세계식량계획(WFP)에 300만 캐나다 달러, 미화로 약 27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미화 약 373만 달러를 대북지원금으로 집행했다고 밝힘.
 - 캐나다의 대북지원은 영양실조인 북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됨.
 - 세계식량계획은 캐나다 정부가 올해 지원한 270만 달러를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에 쓸 예정임.
 - 세계식량계획의 디억 슈테겐 평양사무소장은 지난달 1일 캐나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밀가루와 옥수수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 슈테겐 소장은 곡물을 구입해서 북한으로 들여오는 데 석 달 가량 걸린다면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에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구입한 곡물을 들여올 수 있다고 덧붙임.
 - 한편, 도이어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지원을 중단하고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남북관계 악화일로...농업협력 구상 '표류'(5/16, 미국의 소리)**
- 북한 핵 문제와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한층 더 악화되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 농업협력 구상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남북농업협력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북한과의 협의가 전혀 없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풀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남북 농업협력 논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협력은 정치적 성격이 약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부처 업무보고 때도 온실과 농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진단 역시 지난 2월부터 매달 회의를 열고 있고 이번 달에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김 박사는 추진단이 복합농촌단지의 추진 방식이나 시범협력사업 방안 등 실무적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으며, 북한의 농업개혁 실패 원인으로 농자재의 절대적 부족을 꼽으며 북한 스스로도 외부의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북한은 식량 지원과는 달리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선 체제 유지에 해가 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캐나다 NGO, 북한에 메주콩 25t 지원(5/16, 미국의 소리)**
- 캐나다의 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메주콩 25t을 지원해 이달 16일 선적, 6월 중순께 남포항 도착 예정임.
 - 퍼스트 스텝스는 현재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곳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두유를 나눠주고 있으며, 이번에 지원되는 콩은 강원도와 평안남도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두유를 만드는 데 사용됨.
 - 수잔 리치 대표는 메주콩이 도착해 분배된 것을 확인한 뒤 추가로 보낼 계획이라고 언급함.

8. 북한동향

-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언급하며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민간 교류니 협력이니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민간교류를 원한다면 마땅히 중단된 것부터 원상복구 하는 것이 순리'라고 '5.24조치 철회'를 주장(5.11, 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홍심을 가리기 위한 유치한 놀음)
- * 일본 아사히신문 사설(아베 정권이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속임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등) 등 소개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비난(5.12, 평양방송/일본의 민심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세월호 참사 관련 '박OO정권의 반인민적 약정의 산물'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보수집권세력의 파쇼통치하에서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 권리를 유린당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 및 '박OO정권의 침몰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비난(5.13, 중앙통신)



- 중국 장애인연합회, 5월 13일 北 장애인보호연맹에 협조물자 기증 (5.13, 중앙통신)
 - * 중국 장애인연합회 대표단, 5월 13일 '김정은 선물'을 해당부문 일꾼에게 전달(5.13, 중앙통신)
- 日 자민당 간사장이 워싱턴에서 한 강연(집단적 자위권행사가 아·태지역에서의 억제력강화에로 이어진다 등) 관련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팽창, 재침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야망의 발로'라며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며 날뛰다가 유사시 제일 먼저 불벼락을 맞게 된다'고 위협(5.1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일본이 선물을 맞을 수 있다)
- 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의 증축과 과적 등을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는 南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폐단과 비리, 황금만능의 사회현실이 초래한 재난'이라고 주장(5.14, 중앙통신/인간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부패한 사회)
- 우리 정부의 유엔 '북인권사무소' 유치 움직임에 대해 '동족대결 광신자들의 도발적 음모'라며 '우리(北)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 흐리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압박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5.14, 평양방송/북인권사무소 설치 책동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